

양식장에 불어닥친 韓日 냉기류... 광어 등 수출 10%↓

르포 韓日 경제전쟁 현장을 가다

수산시장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보복
넙치 등 5개 품목 수입검사 강화
“광어·활소라 등 내수 늘릴 것”



서울에 위치한 한 수산시장 모습. /송태화 수습기자

수산물 최대 거래처가 끊길 위기에 처했다.

최근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입 절차 간소화 국가)'에서 배제하면서 전체 수출량의 30% 이상을 차지해 왔던 일본과의 관계가 악화됐기 때문이다. 일본의 수산물 수입검사 강화 등으로 수출여건이 어려워지면서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이 지난 달 17일 발표한 해외시장분석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 6월 한달간 일본 수출액

은 약 6800만 달러.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10.5%가량 떨어졌다.

한국 정부의 후쿠시마 주변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에 따른 보복으로 한국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검사를 강화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지난 6월부터 한국산 넙치와 냉장 조개 등 5개 품목의 수입 검사를 강화했다. 여기에 더해 수산물의 비관

세 장벽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일본은 자국 어업계 종사자를 보한다는 명목으로 '수입쿼터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수산물 수입에 대한 물량을 직접 규제하는 제도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한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수산물을 제한할 수 있다.

대일 수출 의존도가 높은 제주지역은 바짝 긴장 중이다.

앞서 지난 5일 제주특별자치도청은 “수협과 국내 수산물 바이어를 통해 일본 주요 수출품인 광어와 활소라의 내수 판매 물량을 늘려가겠다”고 발표했으나 현지인들의 불안감은 여전하다.

제주시 한경면에서 광어 양식장을 운영 하는 김모(62)씨는 “광어가 일본 수출 규제품목에 포함됐다. 이미 수출가가 떨어진 상황에서 더 이상 규제가 강화되지 않길 바랄 뿐”이라며 걱정을 드러냈다. 검역 절차가 추가된다면 신선도가 생명인 수산물 업계로서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상황이 이러하자 해양수산부는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김성주 주무관은 13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지난해와 대비했을 때 수출, 수입단가가 많이 올라있는 상태”라며 “일본정부의 한국산 수산물 검사강화에 대한 수출검사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의 검사강화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꾸준히 동향 파악을 하는 중”이라며 “일본에서 검사 강화를 한 부분에 대해 정보제공을 해줄 것이며, 강화된 품목에 대한 검사 요청이 있는 경우 지원을 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본정부의 수산물 수입검사가 더 강화됐을 때를 대비한 특별 대응책 마련에 대해서는 답변하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최대 거래처가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수출량은 오히려 늘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체 수산물의 수출량은 35만4433톤으로 전년 대비 17.7% 상승했다. 중국과 베트남 시장이 효자노릇을 해준 덕이다. 각각 45.4%, 40.6% 증가했다. 다만 17%의 수출량 상승세에 비해 수출금액은 2% 성장에 그치며 아쉬움을 남겼다. /신원선 기자, 송태화·김수지 수습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수확의 계절 '성큼'

전국 대부분 지역 낮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을 기록한 13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관계자가 당굴식물 터널을 가꾸고 있다. 기상청은 14일 전국에 구름이 많다가 밤부터 제10호 태풍 '크로사'의 영향을 받아 흐리질 것으로 예보했다. /연합뉴스

가계대출액 855조... 8개월만에 최대

한은, 7월 금융시장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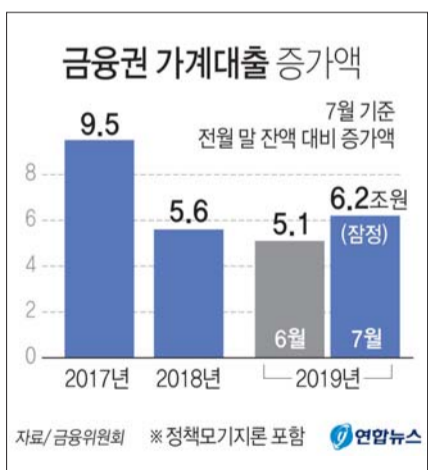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이 올해 들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주택매매와 아파트 분양 물량이 늘어나며 관련 자금 수요가 확대된 영향이다.

한국은행이 13일 발표한 '2019년 7월 중 금융시장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854조7000억원으로 전월보다 5조8000억원 늘어났다. 이는 지난해 11월(6조7000억원) 이후 8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이다.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된 이유는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매매와 아파트 분양 물량이 늘어나면서 신용대출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달 수도권 아파트 분양 물량은 2만4000호로 전월(1만2000호)보다 두 배 증가했다.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 대출 등 기타대출은 지난달 2조2000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10월(4조2000억원) 이후 최대 규모다.

반면 주택담보대출은 지난달 3조6000억원 늘어 전월(4조원)보다 증가 규모가 소폭 축소됐다. 전세자금 수요



가 지속되고 서울 주택매매 거래가 증가했지만 잔금대출 등 집담대출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둔화됐다.

한은 관계자는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점점 확대되고 있던 하나 아직까지는 증가 둔화 속도가 느려진 정도로 보여진다”며 “매월 4000억원 정도로 확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본격적으로 증가세로 전환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7월 기업대출은 853조3000억원으로 전월(2조1000억원) 대비 1조5000억원 증가했다. /김희주 기자 hj89@

자사주 취득, 자산유동화... 이마트 '비상경영'



재무건전성 강화위해 8년만에 매입 총 발행주식의 3.23%, 90만주 취득

이마트가 1000억원 수준의 자사주를 매입한다. 주가 안정화를 통한 주가 가치 제고를 위해서다. 또 '세일 앤 리스백' 방식의 자산 유동화를 통해 재무 건전성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마트가 자사주를 매입하는 것은 2011년 신세계에서 이마트로 기업 분할을 통해 별도 상장한 이후 처음이다.

이마트는 13일 발행주식총수의 3.23%에 해당하는 자기주식 90만주를 949억5000만원에 취득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취득 예정 기간은 14일부터 11월 13

일까지이며 장내매수를 통해 자사주 매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마트는 최근 회사 주가가 실제 기업 가치보다 과도하게 하락해 주가 안정화를 통한 주가 가치 제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해 자사주 매입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마트 관계자는 “이번 자사주 매입은 회사의 미래 실적 성장성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내린 결정”이라며 “앞으로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 기존점 리뉴얼, 수익성 중심의 전점점 운영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주주이익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은 대주주 책임경영의 일환으로 지난 3월 27일부터 4월 4일까지 장내매수를 통해 이마트 주식 14만주를 약 241억원에 매입했다.

이마트는 자사주 매입 결정과 함께 점포 건물을 매각한 후 재입차해 운영

하는 '세일 앤 리스백' 방식의 자산유동화도 진행한다.

이마트는 이를 위해 이날 오후 KB증권과 10여개 내외의 자가점포를 대상으로 자산유동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마트는 이를 시작으로 주관사인 KB증권과의 협의를 통해 자산유동화 대상 점포를 선정할 후 투자자 모집 등 연내 모든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자산유동화 대상인 부동산 자산 규모는 약 1조원이다. 이마트는 자산유동화를 통해 확보된 현금을 재무건전성 강화 등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다.

이마트 관계자는 “세일 앤 리스백 방식으로 점포를 매각한 이후에도 점포들을 10년 이상 장기간 재입차해 사용할 계획”이라며 “기존 점포운영은 자산유동화와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감사인 지정기업 '비적정 의견' 급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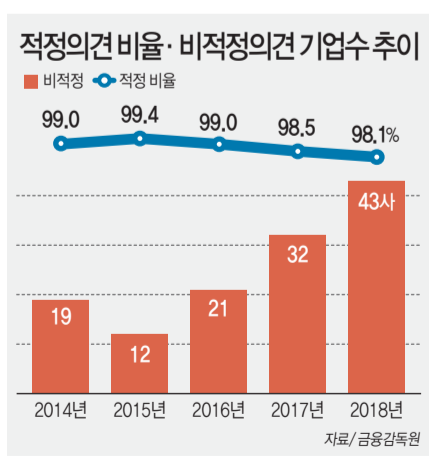
금감원, 2018 감사보고서 분석
비적정 43곳, 의견거절 35곳 등

지난해 감사인 지정기업의 경우 비적정 의견을 받는 비율이 크게 높아졌다. 최근 감사인에 대한 책임이 강화되면서 감사가 더 엄격히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8회계연도 상장법인 2230개사의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적정의견 비율은 98.1%로 전기 대비 0.4%포인트 하락했다. 상장법인의 적정의견 비율은 지난해 2015년 99.4%를 기록한 이후 2016년 99%, 2017년 98.5%로 매년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올해 적정의견을 받지 못한 상장법인은 43개사다. 의견거절이 35개사며, 한정의견을 받은 곳이 8개사다.

특히 감사인 지정기업의 비적정의견 비율이 전기 7.6%에서 지난해 10.8%로



크게 높아졌다. 자유수입 기업의 비적정의견 비율은 0.9%로 전기 1.0% 대비 소폭 하락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정기업의 경우 다른 감사인으로 교체가 예상되고, 교체 후 전입감사인에 대한 책임문제가

대두될 수 있어 더욱 엄격히 감사가 이뤄진다”며 “이와 함께 지정기업은 감사 위험이 높아 최근 감사인 책임강화의 영향을 더 크게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또 “기업은 이러한 감사환경을 고려해 사전에 감사인과 충분히 소통하고 충실한 입증자료 등을 마련해야 하며, 감사인은 기업의 감사위험에 비해 과도한 입증자료를 요구하지 않도록 지정감사업무 수행의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 99.2% ▲코스닥 97.6% ▲코넥스 96.0% 등의 순으로 적정의견 비율이 높았다. 자산규모별 적정의견 비율은 1000억 미만인 상장법인의 적정의견 비율이 96.8%로 가장 낮았다. /안상미 기자 smahn1@